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내년 새 도금고 선정 착수

전북자치도, 현 도금고 약정 기간 연말 만료 따라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돼 투명성 최대한 확보
지역 기여형 지표 확대... 중기 등 지원 계획 신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 1월부터 4년간 173만 도민의 재정을 관리할 새로운 도금고 선정에 본격 착수했다. 현행 도금고의 약정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 선정은 단순한 금융기관 교체를 넘어 '새로운 전북'의 가치를 함께 창출할 핵심 동반자를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9일 도금고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의 가장 큰 특징은 도민 중심의 금고 운영 모델을 정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이번 도금고 선정의 특징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돼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점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내 본점이나 지점을 보유한 모든 적격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놓았다. 이는 과거 특정 기관에 편중됐다는 비판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최적의 파트너를 선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선정 절차는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된다. 19일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9월 3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

해 참여 희망 기관들에게 상세한 안내를 제공한다. 이어 10월 21일부터 이틀간 제안서를 접수받고, 10월 말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11월 중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평가 기준의 혁신적 변화다. 도는 '지역 기여형 지표'를 대폭 확대 반영하여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효율성은 물론,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의지와 사회적 책무 이행 능력을 중점 평가한다고 발표했다.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된 평가 체계를 살펴보면 금융기관의 안정성 25점, 대출·예금금리 22점, 주민 이용 편의성 22점,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 7점, 기타사항 2점으로 배정됐다. 특히 도민 중심 평가에 총 53점을 할애한 것이 눈에 띈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주민 이용편의성 항목 내에 '도내 중소기업 및 서민 지원 계획'이 4점으로 신설됐다는 점이다.

이는 도금고가 단순한 수납·지급 업무를 넘어 도민의 실질적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도의 금고 선정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만호 기자

선정 대상은 1순위로 선정된 제1금고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개 및 기금 4개를 운용하며, 제2금고는 특별회계 3개와 기금 12개를 관리하게 된다. 이번 금고 선정의 특이점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더 많은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현행 약정기간 동안 2금고 운영하는 특정 은행에 금고 운영이 편중되어 도의회에서 불합리한 금고 운영을 지적 받았던 전례가 있다.

김성수 도의원이 편중된 금고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터무니없이 낮은 금리의 금고 운영 실태에 대해 비판적 발언을 한 바 있어 이번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더욱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도금고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과 재정을 책임지는 핵심 동반자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도민 이익과 안정적 재정 관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도민들은 이번 도금고 선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진정으로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전북'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감동적인 파트너'가 탄생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새로 선정되는 도금고가 173만 전북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11월 최종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도내 우수 농특산물 '한자리에'... 전북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

제16회 전북특별자치도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가 지난 19일 도청 서편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우수 농특산물과 임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새만금 신공항 지연 없는 착공 동력 유지”

김관영 도지사 “집행정지 결정부터 항소심까지 빈틈없이 대응”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9일 열린 합동간담회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에 일말의 지연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집행정지 결정부터 항소심까지 빈틈없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새만금 공항은 기업 유치와 올림픽 상사 등 지역발전의 핵심 현안과 연관된 중요 기반시설”이라며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해 동력은 유지하고, 소송 대응 반박 해 동력은 정교하게 기다리며 공한 건설까지 경주할 것”을 강조했다.

다가오는 정부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국감은 국회 예산안결과 현안 해결의 교두보”라며 “도 현안과 직결되는 집의사항과 장·차관 발언 등을 국비확보 논리로 다뤄 향후 국가예산

반영 성과로 연결하리”고 당부했다.

이어, 부처에 요구 중인 전북특별법 특례 관련해서는 “전북의 특수성과 불가피성을 근거로 형평성 논리를 넘어 반드시 특례 수용을 이끌어내고, 소관 특례로 성과가 나며 현장체감도가 높은 특례사업의 경우 적극 홍보하여 전북의 변화상을 도민께 선보일 것”을 지시했다.

또한, 내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공모 대응과 관련해서는 “개보수 대상에 올림픽시설로 활용되는 체육시설이 있는 지 점검하고, 올림픽 유치를 위한 개보수 논리를 보강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전북개발공사가 보고한 공공임대주택 공모 및 매입임대 공급 추진

과 관련하여 “수요 시군의 발굴하여 올해 국토부 공모를 포함한 향후 공모까지 적극 대응토록 하여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게 적극 챙겨 줄 것”을 지시했다.

한편,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고한 재창업자 교육 사업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사업 수요량을 확인하면서, “사업 수요가 큰 경우에는 사업확대에 나서고, 재창업에 성공한 사례를 만들 수 있게 노력해 이를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이 편성 중인 만큼, 최일선 민생 지원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관련 부서와의 소통을 강화해 도민 체감도가 큰 사업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되, 저성과 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할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제13회 완주 와일드 & 로컬푸드축제

2025. 9.26.-28. 3일간

고산자연휴양림 일원

주최 완주군 주관 와일드&로컬푸드축제추진위원회 후원 전북특별자치도

떠나는 청년 막는다... 도, 정착 지원 '온힘'

최근 4년간 도내 청년 매년 평균 8000여명 출향
일자리·주거·교육·복지 등 체감형 정책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9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 인구 유출 문제 해결과 지역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2025년 전북자치도 청년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최근 4년간 도내 청년 인구는 해마다 평균 8,000여명씩 타 지역으로 떠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소멸 위험 등이 심화되고 있다.

청년층 유출과 저출생 고통화가 맞물려 인구가 감소하면서 도내 지자체는 전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시를 제외한 13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해 청년이 지역에 터전을 꾸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을 통한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도전과 기회의 전북, 함께 성장하는 전북 청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문화 △참여·권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5대 정책 분야에 전략을 집중하고 있다. 청년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의 정책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 취업지원사업과 기업 연계 일자리 매칭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 면접수당, 직무체험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청년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도 병행하고 있으며, 지역 활동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활력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청년의 지역 정착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참여 기회도 마련돼 있다. 청년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강화했고, 시군 청년센터와 협력해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정책 추진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도는 지난 8월,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주관한 '제8회 청년친화환경대상'에서 광역자치단체 정책부문 우수자 차단체로 선정됐다. 일자리·주거·역량·참여·정주 여건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도·시군·청년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주요한 평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만호 기자

'9월 20일, 청년의 날'

도내 청년축제 잇따라

9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도내 시군 곳곳에 청년축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9~20일 익산시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린 '2025 전북특별자치도 X 익산시 청년축제(청년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셋째 주 열리는 이번 축제는 공모로 선정된 익산시의 공동 주최하고, 전북청년허브센터가 주관했다.

올해 축제는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 축제'를 슬로건으로, 청년서포터즈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전북 생생아이디어 사업 등 도정 참여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먹거리, 플리마켓, 로컬마켓, 술로이리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주도하며 행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번 축제는 총 111개 도내 기관이 협력해 준비, 단순 부스 운영을 넘어 청년정책 홍보와 지역 상생의 장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익산 외 전주시와 정읍 등 도내 시군에서도 청년축제가 열렸다.

19일 정읍 구 우체국 부지에서 정읍시 청년지원센터가 준비한 '백진부페'가 무알콜 음료 시음과 다채로운 공연, 체험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20일 전주시청 앞 농수광장에서는 청년 등 시민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전주시 청년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만호 기자